

시선

사설

당사자만 모르는 타협 방법

또 총장 선출제다. 새 학기가 밝으면서 합의해 둔 큰 틀과 뜻으로 부드럽게 진행되리라 예상했던 총장 선출제 논의가 뼈격대기 시작한지도 세 달째를 향해가고 있다. 지난해 총장 선출제 논의와 차이가 있다면 올해 들어서는 문제가 되는 한 사안을 둘러싸고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언제 교차할지 그 예상을 세우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논의에 참여했던 대학평의원회나 총장선출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는 구성원 단체의 대표들이 임기를 맞아 대부분 교체되면서 논의에 변곡이 생길 것이라는 예측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 변곡의 크기가 이렇게 크고 깊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구성원 투표 반영비율을 둘러싼 잡음은 구태여 여기에 다시 풀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로가 자신만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태풍의 눈은 교수의회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논란을 만들어 일으켰고, 데워진 바닷물이 태풍을 키우듯 끊임없이 논란의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교수 투표반영 비율 75%가 논란이 되자 한 때 출구전략을 마련하며 조금 물러나나 싶었던 교수의회의 태도는 최근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 더 단단해져 버렸다. 소속 교수들이 높은 투표반영 비율을 원하니, 교수의회는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논의의 여지는 차단당했다. 범대위 구성원들의 항의방문은 서로 언성만 높인, 설마 했던 촌극으로 끝났다. 이성과 논리는 아집과 적의에 무부려진 채 죽었다.

교수의회,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되었던 총동문회가 되었던 그간 총장 선출제에 참여해 온 구성원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집단이다. 이익집단의 장은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라고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표로 선출해 뒀으니 그 근처까지 부정해버릴 순 없다. 다만 이익을 추구하는 와중에 자신들이 타고 있는 더 큰 배의 존재까지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총장 선출제를 논의함은 오히려 법인의 권한이었던 총장 선출 과정에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코자 했던 열망이었다. 경희가 70년 간 이야기해 왔던 민주화의 가치이기도 했다. 그 열망이 작은 이익 앞에 교착상태에 빠졌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지난 5일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는 일부 승객의 욕심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기체 뒤쪽에 탑승했던 41명이 사망한 것은 일부 승객이 수화물을 가지고 탈출하려고 통로를 막은 것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스스로의 목숨도 위태로운 와중에 작은 이해에 집착하다 빚어낸 참사였다.

총장이 공석이라고, 대행체제가 길어진다고 누가 죽지는 않겠지만 구성원들은 언제까지 선장 없는 배에 흔들려야 하나.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대표의 훌륭한 역량이었지만 보다 큰 그림을 보고 소통하는 것은 더 큰 덕목이다.

이 지루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법인도, 대학본부도 아니다. 스스로가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아무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으면 이 지루한 공방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참여마당

총학생회의 새로운 시도, ‘배리어프리 존’

김민제 (행정학 2018)



이번 축제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시도됐다. 바로 ‘배리어프리 존’의 설치였다. 배리어프리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자는 시책이다. 저상 버스처럼 장애인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없앤 사례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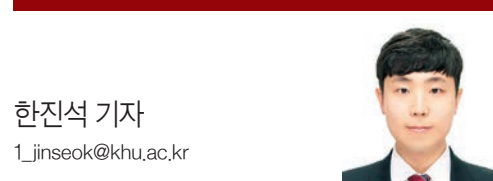
총학생회(총학)은 축제 무대에 배리어프리존을 설치함으로 장애인들이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동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작년 가을 축제 때도 배리어프리 존이 설치됐으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우들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게다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각·청각·언어장애 등 다른 유형

만평



이 주의 주제 - 축제 배리어프리 존 설치

배리어를 넘는 배려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수어(手語)로 ‘현실’이란 단어는 ‘정말’에 ‘오늘’을 더해 표현한다. 그 손짓을 따라하며 세상 깨닫는다. 현실이라는 단어로 말을 시작할 때마다 오늘 실제로 겪는 일을 말하고 있었음을, ‘현실적’이라는 말 앞에서 장애 학생들이 처한 현실은 ‘비현실’이 되는 일이 많았다. 현실적인 예산 문제와 다수의 논리로 가려진 변명들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과 함께 학교의 문화를 꾸려가려는 학생 사회의 작은 시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축제 중 운영된 장애 학생들의 관람 좌석, ‘배리어프리(Barrier-free) 존’이 특별히 반가운 이유다. 무대에 보다 가까워진 배리어프리 존에서 장애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임 모 양을 읽거나 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청각장애 학생, 가까이에서 보아야 하는 시각장애 학생 등 취재 중에 만난 장애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기존 축제에서 배제되었던 모든 유형의 장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장벽이 낮아진 공간이 생긴 것이다. 학내의 구성원으로서 축제에 어울리고, 안전하게 공연을 즐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물론 배리어프리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부분도

있었다. 자막 해설이 제공되지 않아 여전히 장벽에 가로막힌 청각장애 학생들이 있다. 휠체어에 앉은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탓에, 보이는 틈을 찾아 바삐 움직이던 바퀴도 잊을 수 없다. 장애 학생 당사자의 관점에서 다시 배리어프리 존의 운영이 검토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럼에도 이번 배리어프리 존의 설치를 환영하는 까닭은 이러한 작은 시도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젠 축제를 넘어 학교 전반의 시설과 장애 학생들의 권리를 고민할 때가 왔다. 장애로 인해 학습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잃는 것은 장애 학생만의 장벽이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의 장벽이기도 하다. 장애라는 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한 장벽이 곧 우리 학생 사회의 한계를 보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수많은 특성 중 굳이 ‘장애’라는 분류가 있는 것은 그 장벽을 만든 사회의 문제다. 장애인인 겪는 일상의 장애물을 없애자는 시대적 흐름, ‘배리어프리’로부터 학내 사회도 예외일 순 없다.

배움의 시간이라는 비교적 작은 울타리에서도 ‘배리어프리’한 환경을 꿈꿀 수 없다면 우리의 학문과 의식의 성장도 그곳에서 멈출 뿐이다. 일상의 장애물에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함께 알아차리는 일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 학문과 현실의 소통을 외쳐온 경희의 정신은 장애 학생들의 현실과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배리어를 낮추는 배려를 그 장벽을 만든 우리 사회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함께 고민할 것을 학우들에게 제안한다.

의 장애 학우들은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존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배리어프리 존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사이의 장벽을 허물었으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배리어프리 존 설치의 지난 선거 때 총학 ‘경희대로’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이때만 해도 공약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총학은 공약을 잘 지켜주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연락해 사전신청을 받았던 것이다. 작년에는 학교 차원에서의 홍보뿐만 아니라 사전신청 제도가 없어 축제 당일에 혼란이 있었다. 미연에 혼란을 방지한 총학에 칭찬을 보내주고 싶다.

축제날이 다가오자 배리어프리 존 담당자는 입장 시간 및 위치에 관한 상세한 공지를 전했다. 배리어프리 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큰 혼선은 없었다. 스탠딩 석 왼쪽, 무대 앞쪽에 마련된 자리에서는 공연을 보기가 한층 편했다. 다만 휠체어 특성 상 시야가 낮아 스

탠딩 석에 가려진 옆쪽은 잘 보이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당사자의 관점에서 배리어프리 존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대략적인 배리어프리 존을 설계한 후 당사자의 피드백을 수용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저 시력자용 망원경을 준비했고, 대구대학교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배리어프리 존 설치의 단순한 배려를 넘어 장애 학생들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다. 장애 학생들도 엄연한 구성원으로 축제를 동등하게 즐길 권리를 가진다.

이번 배리어프리 존 설치를 넘어 앞으로도 장애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해 작은 것부터 노력해 간다면 더욱 성숙한 대학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배리어프리 존의 설치를 통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던 장애 학생이 당당하게 축제를 즐기고 비장애 학생들도 바람직한 장애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과 폭력의 흐릿한 경계
진지한 고민 필요한 때

세시봉

김수혁 (서울뉴스팀장)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규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부는 민법 915조가 정하는 징계 범위에서 신체적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표라고 말했다.

물론 현재도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둘러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속담이 있듯 폭행과 ‘교육을 위한 체벌’은 다르다는 것이 여전히 한국에서 통용되는 정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8%가 자녀 양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개정 시도는 앞으로 만만치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체벌 규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으면 원활한 가정교육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 또한 사회 통념을 고려해 적절한 허용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벌과 폭력의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체벌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다.

체벌을 가하면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고통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는 경험의 반복이 아동에게 무엇을 남길까.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내재화하기에는, 회초리를 보고 고통을 떠올리는 순간은 너무 짧다. 아동이 단지 부모의 권위와 위협에 굴종하게 만들 뿐인 행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체 체벌이 낳는 즉각적인 효과만 바싹 안 된다. 그 실상은 지금 당장 아이가 시끄럽고 산만하게 굴지 못하게 하는 것, 어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이가 아이답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일 뿐인지도 모른다.

아동에 대한 체벌이 논쟁의 여지없이 부모의 재량에 속한다는 관점에는 사실상 아동을 온전한 인간이 아닌 부모의 소유물에 가까운 무언가로 보아 온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반영돼 있다. 아동은 물론 미성숙한 존재지만 미성숙은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이유지 권리 박탈과 억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시도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부모의 자녀 체벌을 교육으로 불지, 폭력으로 불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과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교육 효과를 지닌 적당한 체벌은 존재한다고 결론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최소한 체벌이 폭력인지 교육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고민이 부족할수록 넘치 말아야 할 선을 넘기는 더욱 쉬울 것이다. 그런 고민 없이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폭력과 교육 사이 흐릿한 경계 속에 방치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국 | 편집장 이후송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자민주) |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경정 02-441-7317(이메일) |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